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4. 1. 1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1월 10일(수) 16:20~17:2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및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과 제2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호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두 가지만 금감원에 질문하겠음. 금투협 규정상의 위반이면 금투협 자율규제 위반으로 금투협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해서 실제 침해된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음. 위반동기를 ‘고의’로 보셨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 신용등급을 확인(check)하지 못했던 ‘중과실’, ‘과실’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실

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들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과 연관된 질문임.

- (보고자) 먼저, 위원님께서 자율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자율규제기관에서는 제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조치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치가 마지막 제재가 되는 그런 형태임.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어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탁사업이 부실화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부실화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손실이라든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래에 발생할 위험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과태료 산정 근거에 대해서 위반동기를 '상'으로 본 것은 법령상 신탁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어 저희가 위반동기를 '상'으로 본 것이고, 위반결과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손실 이런 부분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반결과를 저희는 '보통'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산정했음.
- (위원) 어쨌든 거래관계사의 갑을관계 측면을 감안하면 일종의 선지급 내지는 가지급을 하여야 하는 '을'의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라는 것만이 실제 투자자 피해가 유발되는 절대적 유일한 요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그런 부분을 동기나 결과

측면에서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임.

○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 (위원) 이 정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반동기 ‘상’, 결과 ‘보통’으로 의제해서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일정 부분 자율규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됨. 그래서 동기를 한 단계 낮추거나 또는 결과를 한 단계 낮추는 정도의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0년에 부동산신탁 전문업체인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 위반동기를 ‘상’으로, 위반 결과를 ‘보통’으로 산정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 (위원) 그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 (보고자) 당시에 3억 3,700만 원이 부과됐음. 신탁사업, 특히나 부동산신탁사업에 있어서 사업 중간에 토지비를 벌리기 위해서 선지급금을 줘서 위탁자의 금융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식인데, 사실 이것이 분양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주는 것이어서 시공사가 탄탄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 준공이 지연되거나 하면 사업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그 선지급 기준 중에 시공사 기준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전례를 바꿀만

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임.

- (위원) 저희가 동기를 '상'으로 할지 '중'으로 할지와 관련해서는 위반자가 '고의'에 의한 경우는 그렇지만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중'인데, 이 사안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신탁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고의'로 보게 될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고의'라고 하면 이 부과기준상 '중'이나 '하'로 의율된 경우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주실 수 있는지?

- (보고자) 시공사 등급에 관해서는 협회에서 2010년에 유권해석을 4대 신용평가회사가 내는 신용등급으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고, 협회에서도 이런 사안을 각 신탁사한테 많이 전파를 하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의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몰라서 못했다는, 특별하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동기를 '상'으로 봤음.

- (위원) '보통'으로 보신 사유는 공신력을 실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있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떤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신 것인지? 여기 부과기준에 보면 공신력을 실추하거나 금융기관 신뢰를 상실해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위반행위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대’로 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TF 같은 경우 시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사업이 부실화 됐을 때는 수분양자 보호나 신탁자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 과도한 신탁수익의 선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서는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이유임.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한국자산신탁에 과태료부과를 할 때도 같은 취지로 위반행위 결과를 ‘보통’으로 본 사례가 있어서 전례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를 해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저희가 위반행위 결과를 ‘보통’으로 봤음.

- (보고자)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이 결과 부분을 해석할 때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었고 그리고 언론에 공포가 된 경우 결과 부분을 그렇게 판단해서, ‘경미’ 부분을 판단을 할 때 그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 같음.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 4가지 부동산 토지신탁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면 ‘경미’로 판단하는 것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지금 ‘경미’의 요건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경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임.

- (보고자) 그러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다 종료가 됐고 투자자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미'로 볼 소지도 있다고 판단됨.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음. 제1호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서 위반행위 결과는 '경미'로 하고, 과태료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호 『우리자산운용(주)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감면신청서를 신설하고, 구두를 통한 감면 신청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두로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감면신청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담당자가 구두로 신청했다는 것을 기록 하는 건지?

- (보고자) 조사업무규정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도록 반영하였음.

○ (위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는 기존의 규정으로도 과징금 부과를 해 오던 것인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적으로 했다는 취지이신지?

- (보고자) 그러함. 지금 위반정도가 가장 높은 행위에 대해 검
찰고발이나 수사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병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규정상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명
확화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구두로 진술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를 전제로 하는데 전화에 의한 경우에는 녹음이나 녹화 등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전화를 통한 감면신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위원)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이신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안건 제5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안건 제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호 『(주)멤스 등 11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희 회사는 안경 없이 3D를 구현하는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 특허의 원천이 한 20여년 정도 되었음. 이것을 2017년부터 저희가 사업화를 시작하여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254인치를 개발해서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 설치를 했고 이후에 코로나19 이전까지 훨씬 많은 지하철 역사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이런 매출과 관련된 영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가 코로나19를 맞게 되었음. 코로나19 이후에, 이것을 바로 해결할 줄 알았는데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음. 그래서 자구책으로 회사가 일단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매각하고 직원들 구조조정을 했고 2020년도에 1차 사무실도 정리를 했음.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는 거의 부도가 난 상태이고 지금도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중국의 투자 이 부분이 확정되었고 공장도 가동을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음. 그래서 지금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는데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일단, 저희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시고 과정금에 대한 부분을 유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위원) 지금 회사는 이 위반 이후에는 신고서를 제대로 다 제출하고 있는지?

▶ (진술인) 저희가 외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음.

○ (위원) 그 의무는 이제 없으신 건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고려를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함. 규정개정 이후 최초 적용사례인 점을 고려해서 의미 있는 감경이 있거나 대체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 (위원) 회사 상황을 살펴보니 대부분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함.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공시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두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50% 감경에 동의함.

○ (위원장)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의 과징금과 증권 발행제한 감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됨. 그런데 자조심에서 제기했던 소수의견을 보면 (주)에이엔비글로벌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불공정거래로 형벌(징역 6년, 벌금 700억 원)을 받아서 이 부분은 감경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배제를 하면 중복처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안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음. 또한 (주)에이엔비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꽤 있음. 이 부분을 감안하실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부탁 드림.

○ (위원) 보고받은 감경 논리에 따르면, 규정개정 이후 최초 적용사례이고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한다고 하고 거기에 경영악화에 따른 현실적인 납부능력까지 감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들이 다 해당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감경을 해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으나, 만약 감경에서 배제를 한다면 감경 고려사유 중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이 맞지, 경영진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음. 만약 감경을 배제할 것이라면 이 회사는 현실적인 납부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다만 최초 적용사례이기 때문에 한 25% 정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대표이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감경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음.

○ (위원장) 지금 ○위원님 의견에 대해 실무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저희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 없음.

○ (위원) (주)에이엔비글로벌의 경우에는 감경비율을 차등적용해서 25% 적용하고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서는 50% 적용하는 방안으로, 왜냐하면 (주)에이엔비글로벌의 경우에는 의견서도 아예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차등을 두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임.

○ (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거꾸로 좀 여쭙어 보겠음. (주)오버다임케이는 의견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원래 매출이 취소가 되어서 바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수정을 안

해 주어서, 그런데 금감원은 국세청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 수정된 재무제표를 고려하면 '증권발행제한 3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재량 감경을 하면 3개월을 일단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 있는 원래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를 그냥 쓰고 바로 다음에 했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4,000만 원에서 시작하여 2,000만 원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쭙어보고 싶음.

- (위원장) 그런데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증권발행제한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재량이 있으신 것이니까 (주)오버다임케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과징금 부과보다는 증권발행제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신다면 증권발행제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됨.
- (위원)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함. 현실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음.
- (위원장) 그런데 사실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을 것임.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50% 감경을 하되 (주)에이엔비글로벌은 25% 감경을 하고 (주)오버다임케이는 국세청 부분도 있으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감안하여 증권발행제한으로 감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됨.
- (위원) 동의함.
- (위원장) 제7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규정개정 이후 최초 적용사례인 점,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영악화,

직원 퇴사 등으로 위반이 발생한 점, 회사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멤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50%를 감경한 4,000만 원, (주)에이엔비글로벌에 대해서는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한 9,750만 원, (주)오버다임 케이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정상화를 감안하여 과징금 대신 증권발행제한 1월 그리고 (주)넷피아, (주)센트럴, (주)약침, (주)엘로 모바일, (주)아들과 딸, (주)카리스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주)디엘팜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3월, 이스타항공(주)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월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보고안건 제1호 『OOOO(주) 등 746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17호(2023년) 『OO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제217호 안건은 사전간담회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제217호 안건은 보류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호 『(주)OOOOOOOOO 前대표이사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의결안건 제9호 『(주)OO 前임원 OOO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